

'26년 경찰공무원(경정이하) 정기 승진시험

- 1교시(09:20 ~ 10:50) -

| 목 차 | |
|---------------|----|
| 【헌 법】 | 1 |
| 【경 찰 행 정 학】 | 7 |
| 【경 찰 실 무 종 합】 | 11 |
| 【형 법】 | 16 |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경 찰 청

경 찰 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헌 법】

1.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습헌법의 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의 헌법규범으로 승화된 것으로,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를 도출해 낸 것이다.
- ②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지만,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는 없다.
- ④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2.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① ㉠(O) ㉡(O) ㉢(X) ㉣(X) ② ㉠(O) ㉡(X) ㉢(X) ㉣(X)
- ③ ㉠(X) ㉡(O) ㉢(X) ㉣(O) ④ ㉠(X) ㉡(X) ㉢(O) ㉣(X)

3.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에서는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 ② 제2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였다.
- ③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지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④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4. 선거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 ②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정당법」에 의하면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④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구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 외에 헌법상의 경제질서도 포함된다.

③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6.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②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③ 진정소급입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부진정소급입법에 속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 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가 장래입법에 비해서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7.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 ㉡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에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좁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 ㉢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헌법 제7조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
- ㉣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내려 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방법만이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적 제약이 따른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해서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주체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② 공법인은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만,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 ③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다.
- ④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어 원시선이 나타나는 그 시점의 배아 상태에 이르지 않은 배아에게도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어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9.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하더라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협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 ③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된다.

10. 기본권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② 하나의 규제에 의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 ③ 채권자에게 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와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채권자의 재산권이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④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1.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더라도 위임입법에 의하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 ① ㉠(O) ㉡(O) ㉢(X) ㉣(O) ② ㉠(O) ㉡(X) ㉢(X) ㉣(O)
- ③ ㉠(X) ㉡(O) ㉢(O) ㉣(X) ④ ㉠(X) ㉡(X) ㉢(O) ㉣(X)

12. 헌법 제10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제한하는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부분은 부(夫)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영상감사기에 올라가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짧은 시간 항문 부위를 보이도록 하고, 검사실과 분리된 통제실에서 전담 교도관 1인만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모니터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출력된 영상정보로 은닉물의 존재 여부만을 관찰하며, 영상정보를 녹음·녹화할 수 없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④ 헌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적 인권 보장의 의무로부터 독도 방문객을 위하여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나온다.

13.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기간조항이 197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등으로 복무한 후 이 법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자와 그 이후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인 등으로 복무한 후 이 법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자를 다르게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4.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일반 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
- ㉢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3호 중 “납골시설” 부분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 ㉣ 어떤 조형물이 일부 종교적 색채를 띤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러한 조형물을 역사적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 유지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 ① ㉠㉡ ② ㉡㉢ ③ ㉠㉡㉢ ④ ㉠㉢㉣

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 ④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16.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 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나 행정절차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 ㉡ 구「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증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증인은 위 법률에 의해 진술거부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이라 함은 언어적 표출, 즉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하는 행위를 문자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진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채무자의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재산목록 작성·제출행위는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O) ㉡(O) ㉢(X) ㉣(X) ② ㉠(O) ㉡(X) ㉢(X) ㉣(X)
③ ㉠(X) ㉡(X) ㉢(O) ㉣(O) ④ ㉠(X) ㉡(X) ㉢(X) ㉣(O)

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인도 정보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 ③ 형제자매가 본인의 위임 없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형제자매가 자신의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인의 신분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각종 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18.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 ②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 청구 모두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③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나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할 때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19.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사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 수사처검사가 영장신청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이를 영장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방법으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강제처분 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0.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에는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 ②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소년보호사건에서 1심 결정의 집행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1.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 ②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정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

2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엄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징벌적 처우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업무가 수형자들이 수행하는 작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징벌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알권리의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군인복무규율」 조항은 정보수집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권리의 청구권적 성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 ③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매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④ 표현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

24.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 관계없으나 단순한 ‘내적인 유대 관계’는 공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해당할 뿐 결사의 자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단체의 모금행위를 제한하는 구「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제1항은 모금행위를 하려는 단체의 행복추구권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25. 검열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허용된다.
- ㉡ 검열금지에서 말하는 검열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사후제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검열기관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라면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열금지원칙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허가에는 정기간행물등록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도 포함된다.

- ① ㉠㉡ ② ㉠㉢ ③ ㉡㉣ ④ ㉠㉢㉣

26.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도 포함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국가공무원에 대한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의 효과로서 공무원의 호봉 상승이 지연되거나 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이장을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장으로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장이 되려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아닌 공직시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7.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구두와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청원법」에 의하면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 「청원법」의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① ㉠(O) ㉡(O) ㉢(X) ㉣(X)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X) ㉢(O) ㉣(O)

2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상의 권리는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하고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하면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가 없어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② 토지를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가해지는 재산권의 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금전보상으로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
-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구「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9. 재판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③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입법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 ④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고,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 해결의 시간적 단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된다.

3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하여금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을 통해 근로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므로, 입법자가 가입기간의 상당 부분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유족만을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한 구「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을 다소 높은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수급권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31.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여기서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 입학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의미한다.
- ㉡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과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고등학교별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신입생 선발시기와 지원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 학교가 학생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자녀교육권의 일환으로 보호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정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 정책까지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32.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 ②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
- ③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 ④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대등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모든 노동조합에게 각별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3. 국회에 관한 헌법 규정으로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A)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 정기회의 회기는 (B)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C)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D)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A: 4분의 1 B: 90 C: 40 D: 120
 ② A: 4분의 1 B: 100 C: 30 D: 90
 ③ A: 5분의 1 B: 90 C: 30 D: 90
 ④ A: 5분의 1 B: 100 C: 40 D: 120

34.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국회법」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 ③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5.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같이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 ②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 ③ 대통령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할 때,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 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는 사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

36.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잔여임기가 6개월 남아 있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잔여임기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③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구이므로, 그 회의의 결정은 대외적 효력이 있다.
- ④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는데, 그 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되고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7.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이 있고,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사건의 하급법원을 기속하므로, 동종사건의 하급법원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법원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
-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각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각 결정권을 가진다.

- ① ㉠ ② ㉠㉡ ③ ㉡㉣ ④ ㉡㉢㉣

38.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지만, 동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는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는 없다.
- ④ 하나의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39.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한다.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동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해야 한다.
- ㉢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의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대립 당사자 개념을 상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에게 이른바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준용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③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 국회의 입법행위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침해의 원인이 ‘국회의 입법행위’인 경우에 청구인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의 대상으로 삼는 심판청구는 그 권한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승계되거나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는 종료된다.

【경찰행정학】

1.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고 행정의 정책 형성기능을 중시한다.
- ② 행정은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한 협동적 인간행동이라는 점에서 경영과 차별성을 지닌다.
- ③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기에 공·사 행정일원론의 입장과 비슷하다.
- ④ 최근의 행정은 주체가 정부(government)로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governance)로 확장되었다.

2.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딜레마이론은 딜레마 상황으로 대안의 분절성, 대안 간 상충성, 결과 가치의 동등성, 선택의 불가피성 등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당체제와 같은 중범위 수준의 제도보다 계급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관심을 둔다.
- ③ 포스트모더니티에서 의미하는 타자성(alterity)은 윤리와 무관한 객관적 관찰대상으로서의 인식적 타인이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방향을 잡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보며 행정의 역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3. 과정설에 따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부는 공익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 ②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익은 존재할 수 없다.
- ③ 사회 내 모든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 ④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므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정치적 중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 ③ 헌법은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면서 해당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 ④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공공가치(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가치론은 신공공관리론이 행정의 효율성과 수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 약화가 초래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 ② 무어(Moore)는 공적 가치 창출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정당성과 지원 확보, 공적 가치의 형성, 운영 역량의 형성으로 제시하며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으로 표현했다.
- ③ 정당성과 지원 확보는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부여 환경을 의미하며 시민의 지지 및 정당성, 선출직 대표에 대한 책무성, 시민사회와의 관계, 미디어 평판 등을 중요 요소로 한다.
- ④ 보우즈만(Bozeman)은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공공가치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6.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리규제는 산출규제라고도 하며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② 규제 피라미드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정부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 ③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형태를 띠며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다.
-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이익집단정치는 규제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되나 그 편익은 동질적 소수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7. 로위(Lowy)의 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권화되고 체제수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 ②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 ③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 ④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이 벌어지고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8.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건정책, 사회복지, 형사정책 등 휴먼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평가된다.
- ②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검증된 지식을 중시하는 과학정신과 이를 통해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 사고가 뒷받침되고 있다.
- ③ 헤드(Head)는 증거기반 정책결정 성공 조건으로 양호한 정보 기반, 우수한 전문가,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 연구자·일선관료·정책결정자 사이의 상호 이해 과정 등을 제시했다.
- ④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에 의한 증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9. 정책의제설정 유형 중 내부접근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 ② 외교·국방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분야나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에서 나타난다.
- ③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은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다.
- ④ 정책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한다는 점은 동원형과 유사하지만, 동원형과 달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10. 엘리슨(Alliso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합리모형(Model I), 조직과정모형(Model II), 관료정치모형(Model III)을 제시했다.
- ② 조직과정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③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
- ④ 합리모형은 조직의 상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고, 관료정치모형은 하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11.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정책대안이 가져오게 될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한다.
- ㉡ 정책의 능률성 또는 경제성을 강조하므로 형평성 또는 공평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 공공사업의 경우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너무 낮으면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져 바람직한 사업이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정책대안 선택기준은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 ratio), 내부수익률(IRR) 등이 있고 내부수익률 기준은 정책사업에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을 알지 못하면 사용하기 어렵다.
- ㉤ 순현재가치(NPV)와 편익비용비(B/C ratio)는 높을수록, 내부수익률(IRR)은 낮을수록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사, 일선경찰관 등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계층제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지만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 ② 불충분한 자원,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등과 같은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에 노출된다.
- ③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화와 정형화라는 적응매커니즘을 개발한다.
- ④ 충분한 재량과 적응매커니즘을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집행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3. 실험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실험은 준실험에 비해 내적 타당성면에서 우수하나 실행가능성면에서는 준실험이 보다 우수하다.
- ② 준실험은 단일집단 사후측정설계를 널리 활용하나 짝짓기(matching)를 통한 통제집단 구성도 가능하다.
- ③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대상들을 두 집단에 무작위 배정한다.
- ④ 사회실험은 사회라는 상황 속에서 행하여지는 실험이지만 기본논리는 실험실에서의 실험과 동일하다.

14.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 유형별 조정 기제와 핵심 부문에 관한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조직 유형 | 조정 기제 | 핵심 부문 |
|-----------|-------------|-----------|
| ㉠ 단순구조 | - 직접감독(통제) | - 최고(전략)층 |
| ㉡ 기계적 관료제 | - 작업과정(표준화) | - 핵심운영층 |
| ㉢ 전문적 관료제 | - 기술표준화 | - 기술구조 |
| ㉣ 사업부제 구조 | - 산출표준화 | - 중간관리층 |
| ㉤ 임시특별구조 | - 상호조정 | - 지원 참모 |

- ① ㉠㉢ ② ㉡㉢ ③ ㉠㉣㉤ ④ ㉡㉣㉤

15. 번스(Burns)와 스토크(Stalker)의 기계적 구조에 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모호한 책임관계 | ㉡ 적은 규칙·절차 |
|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 ㉣ 분화된 채널 범위 |
| ㉤ 넓은 통솔 범위 | ㉥ 좁은 직무 범위 |
| ㉦ 계층제 | ㉧ 표준운영절차 |

- ① ㉠㉢㉤ ② ㉡㉢㉣
③ ㉢㉣㉥ ④ ㉣㉤㉥

16.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는 직위분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8년 카터(Carter) 정부의 「공무원제도 개혁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제약을 완화하는 대신 성과관리 요소를 반영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계급제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였으며, 영국 SCS(Senior Civil Service)의 도입취지와 유사하다.
-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하면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급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으로 정의되고 있다.
- ㉣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반영해 보수를 책정하고, 업무성과 달성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조직 내 의사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령, 예규, 품의는 하향적 의사전달 방식이다.
- ② 사전심사, 사후통지, 회람이나 공람은 수평적 의사전달 방식이다.
- ③ 면접, 고충심사, 결재제도는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의상달 방식이다.
- ④ 공식적 의사전달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자료보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8. 조직 내 갈등관리전략 중 갈등해소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상위목표 제시 | ㉡ 회피 |
| ㉢ 타협 | ㉣ 조직의 분화 |
| ㉤ 정보량 조절 | ㉥ 순응 |
| ㉦ 인사이동 | ㉧ 공공의 적 설정(확인) |

- ① ㉠㉢㉤㉦ ② ㉠㉢㉣㉥
③ ㉠㉣㉤㉦ ④ ㉡㉣㉤㉥

19.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관리격자모형을 개발하면서 팀관리형, 과업형, 무관심형, 컨트리클럽형, 중간형의 리더십유형을 제시하였다.
- ②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은 생애주기론을 통해 팔로어의 상황(업무성숙도)과 리더의 행태(지시적 리더십 혹은 지원적 리더십)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 ③ 하우스(House)와 에반스(Evans)는 부하와의 관계설정을 통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구성원 교환이론을 제시하였다.
- ④ 그린리프(Greenleaf)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며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20. 목표관리제(MBO)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50년대 드러커(Drucker)와 맥그리거(McGregor) 등에 의해 창시되었고, 1970년대 미국 정부에 도입되었다.
- ②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상향식 성과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목표에 치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조직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SWOT분석 등을 활용하여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평가를 진행하므로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1.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네트워크문화(networked culture)는 사교성이 높고 결속이 낮은 문화인데 반해 용병문화(mercenary culture)는 사교성은 낮고 결속은 높은 문화이다.
- ② 개인주의 문화는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의미하며 집단주의 문화는 ‘우리’를 강조하는 결속력이 강한 개인 간 관계를 의미한다.
- ③ 남성문화에서는 경쟁, 성취, 권력 획득에 중요 가치를 두는 데 반해 여성문화에서는 관계나 안정에 중요 가치를 둔다.
- ④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상사의 권력이 강해 부하들이 상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상사에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22.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킹슬리(Kingsley)에 의한 대표관료는 관료사회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 반 라이퍼(Van Riper)는 대표관료제를 비례대표로 확대하여 사회집단 구성과 관료집단 구성의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윌킨스(Wilkins)와 윌리엄스(Williams)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할당제가 실시되면 우수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3.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이 육성을 지향한다.
- ㉡ 고위공무원을 우대하여 엘리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 ㉢ 객관적 인사평가기준을 제시하며, 인적자원의 교육훈련 수요 파악에 유리하다.
- ㉣ 직무경계가 모호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24.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의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급 공무원 신규 채용시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신규 채용시에는 6개월간을 시보 임용 기간으로 한다.
- ㉡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 ㉢ 임용(제청)권자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면직(제청)과는 달리 임용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 임용(제청)권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해당공무원을 면직(제청)할 수 있다.

- ㉠ 1개 ㉡ 2개 ㉢ 3개 ㉣ 4개

25. 시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예측적 타당성은 합격자의 시험성적과 합격 후 일정기간이 흐른 다음 근무성적을 추적하여 비교하는 검증방법으로 구성타당도에 해당된다.
- ㉡ 동시적 타당성은 재직자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그들의 근무 성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준타당도에 해당된다.
- ㉢ 차별적 타당성은 동일 개념에 대한 상이한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값의 상관성 정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기준타당도에 해당된다.
- ㉣ 수렴적 타당성은 다른 개념에 대한 동일한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값의 차별화 정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구성타당도에 해당된다.

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되었다.
-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인가·허가·면허·특허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 1개 ㉡ 2개 ㉢ 3개 ㉣ 4개

27. 정부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 ㉡ 2007년부터 발효된 「국가재정법」에 의해 기존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다.
- ㉢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의 5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조사 평가하여야 하며, 5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기술보증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일 경우(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개 ㉡ 3개 ㉢ 4개 ㉣ 5개

28.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행정부의 조세지출을 입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 ㉡ 조세지출은 보조금 성격을 가지므로 대외적 공개 시 국제 무역마찰의 가능성이 있다.
-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부정 한 조세지출을 방지할 수 있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 ㉣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조세지출항목이 신설 또는 폐지되어 의회의 주기적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할 때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 ㉤ 조세지출의 직접감면은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등이며, 간접감면은 세액공제,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이 있다.

- ㉠ 2개 ㉡ 3개 ㉢ 4개 ㉣ 5개

29. 예산의 분류 중 기능별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세입·세출에 적용되며, 정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한다.
- ㉡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 영역별로 예산 내용을 분류하는 것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의 목록과 같다.
- ㉢ 행정수반의 재정정책 수립을 쉽게 하고, 예산의 전체적인 윤곽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
- ㉣ 융통성이 지나쳐 회계책임의 확보가 어렵고 기관별 예산 흐름의 파악이나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30. 예산 결정 모형 중 다중합리성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의사결정자의 분석능력의 제약과 시간부족, 대안 비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모형이다.
- ㉡ 예산운영 과정에서 서로 성질이 다르지만, 연결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다섯 개의 의사결정 흐름이 통합되면서 초래되는 모형이다.
- ㉢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 단위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의 예산결정에 적합한 모형이다.
- ㉣ 미시적 수준의 예산의사결정을 설명하며,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형이다.

31. 우리나라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관한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선순위 표시법은 하급기관이 예산 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명시해 줌으로써 예산삭감이 편리하고 시급한 사업이 증시될 수 있지만, 예산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 ② 증감분석법은 역점사업이나 예산 비중의 변화 파악이 수월하며 전년도와의 차이가 있는 부분만 사정하므로 각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액에 대한 검토가 등한시된다.
 - ③ 무제한 예산법은 하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가 편하지만, 상급기관이 예산 삭감에 모든 부담을 지므로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다.
 - ④ 항목별 통제법은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들을 검토하기 쉽지만, 한 직원이 모든 부처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단일항목을 사정할 수는 없다.

32. 「국고금 관리법」상 예산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수입징수관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은 분리되어 있다.
- ㉡ 수입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징수·수납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면 안 된다.
-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특별회계는 수입금을 전사용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전제하여 국민이 예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로 활동한다.
- ② 빅셀(Wicksell)은 국가가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시민의 재정 선호를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된다고 보았다.
- ③ 시민들의 재정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다.
- ④ 시민의 재정선호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납세자소송제도가 있다.

34.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자치는 주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지역의 공공문제를 주민의 의사와 참여에 기초하여 그들의 판단, 부담,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당해지역의 행정을 자신의 권능과 책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주민자치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연원을 천부적인 기본권에 두고 있으며, 단체자치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해 법인격과 그에 따른 지방업무 수행권을 부여했다는 수탁설에 그 성립의 기초를 두고 있다.
- ③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포괄적 수권주의를 채택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으로 개별적 수권주의를 채택한다.
- ④ 주민자치는 입법적·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기관통합형에 기초하고, 단체자치는 행정적 통제를 중심으로 기관대립형에 기초한다.

35. 신중앙집권화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규모 자치단체의 통합과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의 통합 등을 통해 광역행정 체제로 발전하여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
- ② 현대산업사회로 진행하면서 행정 기능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로 국가·지방 공동 소관 사무가 증가하고, 국가 직속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 ③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의 공공 재원인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한 행정이 늘어나면서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늘어나고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보다 고유사무의 비중이 커져서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가 강화된다.

36.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이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연결구조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연결되는 단층제와 중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중층제가 있다.
- ②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계층 구분은 광역과 기초로 2계층의 중층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한다.
- ③ 단층제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의사전달이 원활하지만,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 ④ 중층제는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행정책임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37. 「지방자치법」상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38. 라이트(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중첩권위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 ② 지방정부는 재량권을 갖고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엘콕(Elcock)의 동반자 모형과 유사하다.
- ③ 지방정부는 자치사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위임사무의 경우 단체위임사무의 비중이 크다.
- ④ 지방정부의 인사는 중앙정부와 상호교류하고, 재정은 상호의존한다.

39.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기능 배분 관련 법령과 추진 기구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김대중 정부 |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 ㉡ 노무현 정부 | - 「지방분권특별법」 | -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 |
| ㉢ 이명박 정부 |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 ㉣ 박근혜 정부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 지방분권위원회 |

- ① ㉠㉡ ② ㉠㉢ ③ ㉠㉣ ④ ㉡㉣

40.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9.24%,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포함하고 있다.
-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 ㉣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경찰실무종합】

1. 경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비해 관료주의화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 ㉡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교통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이 이에 해당된다.
- ㉢ 행정경찰은 현재 또는 장래 사태에 대한 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일치한다.
-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 평시경찰은 평온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된다.
- ②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 ③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협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협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 추상적 위협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④ 경찰은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하여야 한다.

3. 갑오개혁 이후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경무사를 수장으로 하는 경무청이 신설되었다.
- ② 경부 경찰체제에서는 총순이 관찰사를 보좌케 하여 이원적 체제를 타파하였다.
- ③ 1896년 한성 부산 간 군용전신선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4.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군정 초기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일제강점기 경찰조직을 유지하였다.
- ② 1946년 1월 16일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에 의해 경무국이 경무부로 격상 운영되었다.
- ③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고 경제경찰,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④ 1945년에는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보안법을 폐지하였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시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④ 제1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7.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로 구분되며, 특수경과는 운전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로 구분된다.
- ②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으나, 신설할 수는 없다.
- ③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8. 「경찰공무원법」상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다음 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 ②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③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9. 경찰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③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0.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포함한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처분의 재심사의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처분의 재심사의 신청은 당사자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④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 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 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 ②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 ③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 기록이 필요한 경우
- ④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범죄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관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한다.
- ㉣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경찰 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업의 원리란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 ② 단순반복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통솔범위가 좁지만,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 통솔범위가 넓다.
- ③ 계층제 원리는 조직 경직화를 초래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새로운 기술·지식 등 도입이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 ④ 무니(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중시하여 조정을 목표달성과 직결되는 조직의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②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 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④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다음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6.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절차, 신고절차, 입법예고절차, 행정조사절차 등을 규율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17.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②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 원이다.
- ④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국경찰사에서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경찰서비스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순으로 제정되었다.
- ②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최소주의는 윤리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고 더 이상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③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④ 「공무원 행동강령」에 경찰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9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대상에는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가 포함된다.
 - ④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사회학적 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머튼(Merton)의 긴장이론은 하위계층의 목표달성 좌절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고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 ② 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이론은 좋은 자아관념이 범죄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가담치 않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 ③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애착, 참여, 진념, 신념이라는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게 되면 범죄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④ 코헨(Cohen)의 하위문화이론은 범죄를 중류계층에 대한 반향이 아닌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2. 범죄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 입장에서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이라 주장한다.
 - ②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발생 3요소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자) 부재를 들고 있다.
 - ③ 집합효율성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 ④ 방어공간이론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3. 「유실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 ③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 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자
 -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④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5.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없이 고소·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각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 ③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구술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④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26.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 감청서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27.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청색으로 한다.
 -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홍색으로 한다.
 - ③ 보통 장물수배서는 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백색으로 한다.
 - ④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하며 백색으로 한다.
28.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③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해야 한다.
 - ④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29.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도경찰청 경비과장은 감사,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반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 ③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④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30. 「통합방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 “을중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 “방호”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은 시·도경찰청장이 행한다.
- ② “공관지역”이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 ③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B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④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도로교통 관련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 ③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동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33.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②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한다.
- ③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 결과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온 직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4. 「도로교통법」상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②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③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④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5.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지만,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시민사회 단체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 ④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철회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최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철회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③ 제6조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로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으며,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전 금지된 집회라면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다.
-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도 금지한다.
- ③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 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②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9.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하지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0.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서 발부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범죄관련인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부
- ②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실종자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부
- ③ 오렌지색수배서(Orange Notice) - 위험물질 경고를 목적으로 발부
- ④ 보라색수배서(Purple Notice) - 범죄수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부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②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 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범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 ④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벌 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① ㉠㉡㉢㉣

② ㉠㉢㉣

③ ㉠㉣

④ ㉡㉣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면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 ③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후의 사정인 이탈기간의 장단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실행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4.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②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③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④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살인의 실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A에 대하여는 살인미수, B에 대하여는 과실치사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 ②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돌로 A의 머리를 때려 A가 기절하자, 甲은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모래 구덩이에 묻었는데 A가 이로 인해 질식사 한 경우 甲에게 살인 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
- ③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구타하였는데 그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A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A의 쌍둥이 동생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인정된다.

6.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 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 6일간에 여덟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감행하였다면,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 ②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④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8.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기소처분이전부터 저질러졌다면 그 무혐의 처분결정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나, 무혐의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 무선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 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 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 광역시의회의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① ㉠(O) ㉡(O) ㉢(O) ㉣(X) ② ㉠(O) ㉡(X) ㉢(X) ㉣(O)
- ③ ㉠(X) ㉡(X) ㉢(O) ㉣(O) ④ ㉠(X) ㉡(X) ㉢(O) ㉣(X)

9.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②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 1인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경우, 「담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 필연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더라도,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10.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 ② 甲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당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영향이 없다.
- ④ 甲이 乙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1.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백화점 입점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방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12.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

甲은 회식을 마치고 밤길을 걸어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 쪽을 바라보았다가 창문 밖을 주시하는 운전자 A와 눈이 마주친 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되돌아보니 자신의 뒤를 바짝 뒤따르는 정체불명의 B를 발견하게 되었다. A와 B는 강도강간미수 사건 발생지역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었는데, 甲은 A와 B를 노상강도범으로 오인하고 그들로부터 ‘픽치기(노상강도)’를 당할까봐 무서워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B가 계속 뒤따라 오자 강도범을 상대로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하에 상해의 고의로 B를 가격하여 부상을 입혔다.

- ① 이 사례에서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적 착오규정 유추적용설은 고의불범은 인정하나 책임고의를 부정하여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과실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사례의 착오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보는 엄격 책임설은 甲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해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사례에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甲에게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하나 책임은 부정하여,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과실범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이 사례에서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은 甲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3.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의 직책상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는,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② 실화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라든,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④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남겨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14.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샷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찢려 상처를 입었다면, 강도치사죄가 성립한다.
- ④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관계없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15.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합범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로 행위자 전원의 법정형이 모두 같은 경우와 행위자의 지위·역할 등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 경우가 있다.
- ②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 ③ 대항범은 2인 이상의 대항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대항자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와 대항자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 대항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 ④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항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항범을 전제로 하므로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16.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중범의 행위이므로 중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④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17.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교사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형은 모두 법정형을 의미한다.

- ③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 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18.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면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④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19.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는 「형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은 경합범에 대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 적용되며, “다시 형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다는 의미이다.
- ④ 포괄일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라는 것으로 이 수개의 행위가 혹은 흡수되고 혹은 사후행위가 되고 혹은 위법 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등으로 본래적으로 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과형상의 일죄와도 이 점에서 그 개념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20.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징역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5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 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경우,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벌금은 5만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판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1. 학대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 ②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수습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 ③ 사회복지사 甲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A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A를 보고 웃게 하고 A의 사진을 찍고, A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A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④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22.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죄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횃집 주방에 있던 회갈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③ 채권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의 위배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갈죄가 성립한다.
- ④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3.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 ② 甲, 乙, 丙은 2008. 11.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에 있는 건물 3층 甲의 사무실에서, A가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乙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2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A를 같은 장소 내 빈 사무실로 데려가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甲, 乙, 丙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죄가 성립한다.
 - ③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체포·감금죄의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회복된 시점으로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나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고,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기수시점이다.
24.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A(여, 11세)에게 다가가 ‘학교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고 말하면서 옷소매를 끌어당겨 A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 하였으나 A가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甲에게 약취행위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인정된다.
 - ② 甲과 A는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 A는 자녀 B(만 5세)와 프랑스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甲이 B를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양육하던 A로부터 B를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B를 데려다주지 아니한 채 A와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 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 ③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피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 그들은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가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일상 생활의 장소적 중심인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와 부모의 보호관계가 제한 혹은 박탈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5.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

- ③ 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에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지만,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
 - ④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후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6.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아파트 각 동 로비에 설치한 TV모니터 화면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김○○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 표현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된다.
 - ②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된다.
 - ③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은 2019. 9. 5. 06:40경부터 0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도로변 가로수 등에서 A가 설치한 ‘재개발사업 관련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 일들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 3개의 끈을 각각 잘라 떼어내 버려 A가 이 사건 현수막을 이용하여 더 이상 재개발 관련 조합원 등 사람들에게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홍보하지 못하게 한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 甲은 A가 후임 회장으로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에게 그 인감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甲이 A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A회사 몰래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甲은 A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甲이 A를 기망하여 A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백화점에서 물품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여 甲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A가 甲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A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甲은 그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기는 하지만 甲은 A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甲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그 사과 나무에서 무단으로 사과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과 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 ① ㉠(O) ㉡(O) ㉢(O) ㉣(X) ② ㉠(X) ㉡(O) ㉢(O) ㉣(O)
 ③ ㉠(X) ㉡(X) ㉢(O) ㉣(O) ④ ㉠(X) ㉡(X) ㉢(X) ㉣(X)

29.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A가 주거하는 101호의 출입문을 당겨본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甲, 乙, 丙이 합동 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乙, 丙이 범행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甲은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 甲에게도 합동절도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A의 자취방에서 A를 살해하고 그 방에서 사망한 A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 방 벽에 걸려있던 A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A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甲에게는 살인죄 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A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살해한 경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30.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체 한도 제한으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A를 기망하였고, A가 甲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甲에게 이전한 경우, A가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던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乙이 甲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乙은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乙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매수인 A가 매도인 甲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였고 甲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으로서는 A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A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A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면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A에게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결과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와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31.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③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 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32.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알 수 없는 경위로 타인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자가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③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 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33. 부동산 및 동산의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에 관한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매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계약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청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행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34. 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 ③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형법상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 ④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35.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공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 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③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6. 성폭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음행매개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 ③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 ④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37.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공무원이 중죄자로 하여금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면 그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 내부 사무처리 기준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 제133조의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3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그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서 예외적인 때에 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물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시사프로그램의 PD 및 촬영팀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점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이러한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는 교정시설 등의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해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다.
 - ②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 역시 포함된다.
 -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각 날짜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②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